

최신 노동 뉴스

2026년
4월

노무법인 의림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90

☎ 053-719-2408

📠 053-719-0019

시를 이용해 제작한 이미지입니다.

< 차 례 >

【 감독분야 】

1. 중앙-지방, '노동감독 원팀'으로 첫발	1
2. 가짜 3.3 위장 고용 108개소 집중 감독	2
3. 신재생에너지 기업 대표 폭행·폭언 특별감독 착수	3
4. 개정 노동조합법 2·3조 3월 10일 시행	4
5. 개정 노조법 시행 첫날 407개 하청노조 교섭 요구	5
6.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 현장 집중점검	6
7. 금속가공 사업장 2,865곳 합동 긴급 안전점검	7

【 안전분야 】

1. 산재 사망 이주노동자 예우사업 첫 시행	8
2. 안전교육 참여로 보험료 절감	9
3. 가짜 3.3 위장 고용 주요 감독 사례 발표	10
4. 현장 목소리로 만드는 건강한 안전 일터	11
5. 임금·퇴직금 5억 체불 사업주 10년 만에 구속	12
6. 신재생에너지 기업 특별감독 착수	13
7.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정, 3개 법률안 국회 의결	14
8. 산재예방 노동안전 슬로건 공모전 당선작 발표	15
9. 화재·폭발 사고 예방 긴급 현장 집중점검	16

【 고용분야 】

1. 2026년 찾아가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실시	17
2. 장애인고용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	18
3. 노동자 금융부담 완화,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용자 확대	19
4. AI 일자리 매칭, 하루 57명 취업 연결	20
5. 2026년 2월 고용동향 및 평가	21
6. 건설일용직 퇴직공제부금 8,700원 인상	23

【 지원자료 】

1. AI 훈련지원센터 30개소 선정, 전국 중소기업 지원	24
2. 배우자 출산휴가 업무분담 지원금 신설	25
3. 제2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준비	26
4. 중소기업 육아휴직 대체인력 최대 1,880만원 지원	27
5. 노동자 금융부담 완화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확대	28
6. 중소기업 AI 전환 현장훈련 5개 운영기관 선정	29
7. 건설근로자 결혼식 지원금 접수 개시	30
8. 전자카드 단말기 임대비용 지원 2년 연속 시행	31
9. 건설근로자 자녀 교육비 지원 확대	32
10. 폭염 대비 이동식에어컨 등 예방장비 지원 본격화	33

중앙-지방, '노동감독 원팀'으로 첫발

17개 광역 시·도와 감독권한 위임·공공부문 모범적 사용자 역할 강조

참석 자치단체	위임 추진	대책 발표
17개 전국 광역 시·도 부단체장	사업장감독 소규모 취약 사업장 감독	4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추진 배경 및 개요

- **회의 개최** 2026년 3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 주재로 개최
- **주요 목표** 중앙-지방 '노동감독 원팀' 체계 구축 및 공공부문 모범적 사용자 역할 강조
- **참석 규모** 중앙 정부 관계자 및 17개 광역 시·도 부단체장 등이 참석

주요 추진 내용

- **사업장 감독권한 위임** 지난 3월 12일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정에 따라 법적 근거 마련, 소규모 취약 사업장 감독 권한을 지방정부에 일부 위임 추진
- **실행 기반 지원** 중앙정부가 지방정부 감독 시행을 위해 인력·예산·교육 등 기반 지원, 지방정부는 감독 전담 조직 및 인력 조속 마련 당부
- **비정규직 처우개선** 자치단체 비정규직 고용·임금 정보 실태조사 진행 중, 4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관계부처 합동 발표
-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지방정부는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성실한 교섭 진행, 현장과의 적극적 소통을 통해 공공부문 근로조건 개선 추진

향후 계획 및 기대 효과

- **지역 맞춤형 감독** 지역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와 중앙의 전문성이 결합되어 촘촘한 노동 안전망 구축
- **공공부문 선도** 지방정부가 비정규직 채용·노동조합 교섭에서 모범적 사용자로서 민간 사업장의 귀감이 되도록 유도

가짜 3.3 위장 고용 108개소 집중 감독

72개소 1,070명 적발, 6억 8천만원 체불임금 조치

감독 대상	위반 적발	체불임금
108개소 25년 12월~26년 3월	72개소 67% 적발률, 1,070명	6억 8천만원 근로기준법 위반

감독 개요 및 추진 배경

- **감독 대상 선정** 국세청 원천세 신고 자료, 노동단체 신고 정보 활용하여 근로소득자 5명 미만이나 사업소득자 합산 30인 이상 의심 사업장 선정
- **감독 기간** 2025년 12월 1일부터 2026년 3월 5일까지 약 3개월간 집중 기획 감독 실시
- **감독 목적** 형식상 근로계약 체결하나 실제로는 사업소득(3.3%)으로 원천징수하는 위장 고용 적발 및 노동자 보호

주요 적발 사례 및 위반 내용

- **A 콜센터** 교육생 277명을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4대 보험 미가입, 최저임금 미달액 및 휴일근로수당 1억 4천 7백만원 체불
- **B 금속가공업체** 하도급계약으로 인건비 부담 경감 이유로 137명 중 136명(99.3%)을 사업소득 처리, 원청이 2차 협력사 35개 업체 자체 조사하여 1,300여명 4대 보험 가입
- **C 물품 포장업** 근로자에게 사업소득세 비교 제시하여 선택 유도, 35명 중 34명(97.1%) 위반, 퇴직자 포함 48명 주휴수당 6천 4백만원 체불
- **D 조선기자재·E 베이커리** 조선업 인력 유동성과 단기계약 이유로 고용 형식 남용, 특히 E는 '사업장 쪼개기'로 5인 미만 회피, 1천 2백만원 연장야간휴일수당 체불

향후 계획 및 조치사항

- **행정 조치** 4대 보험 미가입자 근로복지공단 통보, 고용·산재보험 직권 가입, 과거 보험료 미납분 소급 부과 및 과태료 처분
- **세무 조회** 사업소득으로 잘못 원천징수한 부분을 국세청에 통보하여 개정 처리
- **사전 예방 활동** 구인광고 주기적 모니터링, 지역단위 협·단체 간담회 및 교육 홍보 강화, 부처간 협조를 통한 지속적 감독 추진

신재생에너지 기업 대표 폭행·폭언 특별감독 착수

야구방망이 위협·흥기 발언 등 근로감독관 8명 투입 집중조사

감독관 투입	감독 착수	감독 대상
8명 서울청 광역·관악지청 합동구성	2026.3.13 언론보도 직후 즉시 특별감독	신재생에너지 기업 서울 소재 ○ 기업

감독 배경 및 개요

- **감독 계기** 서울 소재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대표가 직원들이 있는 사무실에서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는 등 위협 행동과 '흥기로 찌르겠다'는 폭언을 일삼은 언론보도가 발생
- **감독 규모** 고용노동부 산하 서울고용노동청 광역노동기준감독과와 서울관악지청 노동기준감독과가 합동으로 감독관 8명으로 구성된 감독팀 운영
- **사건의 심각성** 대표 사무실 서랍에 테이프로 휘감은 흥기를 보관하면서 위협적 발언을 반복한 점으로 보아 조직적 괴롭힘과 범죄행위로 판단

주요 감독 항목 및 내용

- **근로기준법 위반** 제8조 폭행의 금지 조항 중점 검토 및 위반 여부 확인
- **직장 내 괴롭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및 피해자 규모 면밀 조사
- **노동관계법 전반** 임금체불, 근로시간, 산업안전보건 등 전체 노동관계법 집중 점검
- **신속·면밀 조사** 다수 피해자 의심 사항을 고려하여 진상 규명에 집중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무관용 원칙 적용

장관 입장 및 향후 계획

- **장관 발언** '언론에 보도된 영상은 상상하기 어려운 충격적 사건이며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평가
- **향후 방침** 현재 특별감독을 통해 철저한 진상 규명을 추진하고,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 조치하여 유사사례 재발 방지

개정 노동조합법 2·3조 3월 10일 시행

원·하청 노사 대화 제도화로 갈등 예방, 3가지 현장 안착 지원방안 추진

시행일	지원위원회	주요목표
2026.3.10 공포 후 6개월 경과	단체교섭 판단지원 법률·현장 전문가 참여	원·하청 대화 실질적 근로조건 결정권자

법 시행의 핵심 변화

- **사용자 범위 확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원청도 사용자로 인정
- **노동쟁의 대상 확대** 정리해고, 구조조정 배치전환 등 사업경영상 결정과 단체협약 위반도 쟁의 대상 포함
- **단결권 보장 강화** 근로자가 아닌 자 포함을 이유로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 금지
- **손해배상책임 개선** 부진정연대책임 하에서 책임비율을 분리 정산하고 감면청구 및 면제 규정 신설

개정법 현장 안착 3대 지원방안

-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운영** 원·하청 사용자성 판단 등 반복 쟁점에 대해 판단 기준과 방향성 제시, 자문사례 공개로 기준 마련
- **설명회·세미나 개최** 3월 중 설명회 개최, 상반기 정기세미나로 사용자성 판단·교섭절차 운영 등 핵심쟁점 공유
- **현장 밀착 지도** 지방관서 전담반 구성으로 교섭절차 안내, 선제적 사업장 지도, 상생교섭 컨설팅 및 모범모델 확산
- **공공부문 모범역할** 책임있는 태도로 노동계 요구 수렴, 실효적 근로조건 개선방안 검토, 선도적 노사관계 모델 구축

지원체계 및 문의

- **해석요청 방법** 노동포털 홈페이지(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서식 제출로 개정법 해석 신청 가능
-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044-202-7611), 개정노조법현장지원단(044-202-7372) 문의

개정 노조법 시행 첫날 407개 하청노조 교섭 요구

민간 143개소·공공 78개소 대상, 81.6천명 규모의 교섭 신청

원청 사업장	하청 노조	교섭단위 분리
221개소 민간 143개, 공공 78개	407개 총 81.6천명 조합원	31건 노동위원회에 신청

개정 노조법 시행 현황

- **시행 첫날** 3월 10일 하루동안 221개 원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407개 하청노조·지부·지회(총 81.6천명)에서 교섭 요구
- **상급단체별 현황** 민주노총 218개소(357개 노조, 67.2천명), 한국노총 9개소(42개 노조, 9.2천명)
- **주요 사업장** 현대자동차·현대모비스·현대글로비스, 건설사 90개소, 포스코·쿠팡CLS, 공공기관 등

즉시 교섭 절차 개시 및 분리 신청

- **즉시 공고 사업장** 한화오션, 포스코, 쿠팡CLS, 부산교통공사, 화성시 등 5개 원청이 교섭요구 사실을 즉시 공고하며 창구단일화 절차 개시
- **교섭단위 분리** 하청노조가 노동위원회에 총 31건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 노동위원회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판단한 후 합리적 분리 결정
- **법적 절차** 분리 이후 해당 교섭단위에서 창구단일화 절차 진행으로 실질적 교섭권 보장

향후 정부 지원 계획

- **현장 밀착 지원** 지방노동관서 전담팀을 통해 교섭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실시간 모니터링 및 지도
- **단체교섭 판단지원** 개별 교섭의제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에 대한 정부 유권해석 신청 시 위원회를 통해 신속 답변 및 전문가 자문 공개
- **공공부문 모범 역할** 공공부문의 책임있는 태도로 노동계와 충분히 소통·협의를 하여 선도적 노사관계 모델 구축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 현장 집중점검

3월 26일부터 4월 7일까지 고위험 사업장 1,000개소 대상 안전 점검

점검 기간	점검 대상	중점 항목
12일간 3.26~4.7 화재·폭발 예방	1,000개소 건설현장·제조업 등	6개 분야 가연물·화기작업·비상구 등

추진 배경 및 개요

- **긴급 점검 배경** 2026년 3월 20일 대전시 대덕구 제조업체에서 노동자 사망 화재사고 발생에 따라 유사 사고 재발 방지
- **점검 대상** 건설현장, 제조업 등 화재·폭발 발생 고위험 사업장 1,000개소
- **점검 기간** 2026년 3월 26일(목)부터 4월 7일(화)까지 12일간

핵심 점검 항목 및 안전조치

- **작업장 가연물** 인화성·가연성 물질 파악 및 안전장소 보관 철저
- **화기작업 관리** 용접·용단 등 화기작업 시 불티 비산 방지, 주기적 환기, 화재감시자 배치
- **전기·정전기 방지** 전기기계·기구 점검, 제전장치 사용, 설비 접지 등 조치
- **소방시설 준비** 소화설비·비상구 설치, 방화구획 정리정돈, 경보장치 작동상태, 비상대피 훈련 실시

행정 조치 및 향후 계획

- **법 위반 적발 시** 즉시 과태료 부과 및 사법 조치 등 엄정 대응
- **추가 협업 점검** 소방청·국토부와 합동으로 유사·동종업종 사업장 별도 긴급 안전 점검 실시
- **사업장 당부** 화재·폭발은 대규모 사망사고로 이어지므로 경각심을 갖고 안전관리에 소홀함 없을 것

금속가공 사업장 2,865곳 합동 긴급 안전점검

대전 공장 화재 재발 방지, 3월 30일~4월 17일 3주간 추진

점검 대상	점검 기간	참여 기관
2,865곳 절단·열처리 등 위험공정 사업장	3주간 3.30~4.17 관계기관 합동	3개 부처 소방청·노동부·국토부 등

추진 배경 및 개요

- **대전 공장 화재사건** 2026년 3월 20일 발생, 노동자 14명 사망 60명 부상으로 인한 긴급 대응
- **합동 점검 추진** 소방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이 연대하여 유사 사고 재발 방지
- **점검 대상 범위** 전국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 26개 유사 업종 1만 4천여 개소 중 화재 위험 공정 보유 2,865개소 선정

주요 점검 내용

- **시설·전기 안전** 금속분진 집진기 관리상태, 주기적 청소 여부, 전기설비 안전관리 실태 점검
- **위험물 관리** 지정 장소 외 무허가 위험물 제조·저장·취급 행위 등 불법 안전관리 적발
- **건축물 안전성** 최종 건축도면 대조를 통한 불법 증축 및 무단 구조변경 여부 확인
- **화재예방 수칙** 인화성 물질 취급, 용접 작업 시 불티 방지, 정전기 방지 조치 이행 여부 점검

향후 계획 및 특징

- **안전교육 병행** 화재 초기 대처법, 119 신고 요령 등 현장 관리자·노동자 대상 실질적 재난 대응 교육 실시
- **영세사업장 지원**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화재 안전 컨설팅 및 시설 개선 지원으로 적발 넘어 실질 개선 추진

산재 사망 이주노동자 예우사업 첫 시행

근로복지공단, 베트남 이주노동자 유족 귀향 전 과정 지원

첫 시행	지원 대상	협력 기관
1건 산재 사망 이주노동자 예우사업 첫 사례	베트남 국적 고인 및 유족 일행	2개 근로복지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업 추진 배경 및 개요

- **고인 정보** 지난 3월 10일 경기도 이천 자갈공장에서 작업 중 산업재해로 숨진 베트남 청년 이주노동자
- **사업 목적** 타국에서 산재로 생을 마감한 이주노동자 유족의 심리적·행정적 어려움 경감 및 존엄한 귀향 배웅
- **협력 체계** 근로복지공단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협력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공공기관 예우사업

주요 지원 내용

- **입국 지원** 유족의 입국 순간부터 출국까지 전 과정을 공단 직원이 함께 동행
- **행정 서비스** 산재보상 관련 행정 절차 안내 및 유골함 운송 절차 상담 제공
- **공항 편의** 유족 전용 대기 공간 및 임시 추모 공간 마련, 탑승 게이트까지 동행
- **물질적 지원** 위로금 및 위로 서한 전달, 유족급여·장례비 등 산재보험급여 신속 지급

향후 계획 및 추진 방향

- **사업 확대** 산재 사망 이주노동자 예우사업을 정례화하여 인도적 지원 체계 단계적 확대
- **다국어 지원** 베트남어 전담 상담사 채용, 16개국 언어 산재보험 가이드북 제작·배포
- **국제 협력** 유관기관 및 해외공관과의 협력을 통해 이주노동자 보호 및 유족 지원 지속 강화

안전교육 참여로 보험료 절감

이륜차 안전교육 2시간 이수 시 보험료 5% 추가 할인

할인율	교육시간	시작일
5% 이수 시 추가 할인	2시간 이륜차 사고예방교육	3월 21일 특약 개시 일정

추진 배경 및 개요

- **정책 추진 기관**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현대해상 협업
- **목표** 배달종사자 사고 예방과 경제적 부담 완화의 안전 선순환 구조 마련
- **핵심 취지** 안전이 보험료 할인으로 연결되는 종사자들이 체감 가능한 혜택 제공

주요 내용

- **교육 과정** 공단의 이륜차 교통안전교육 이러닝 2시간 이수
- **할인 내용** T-MAP 안전운전 할인 특약(최대 10%)에 추가로 5% 할인 (최대 15%)
- **대상자** 배달플랫폼노동자 등 영업용 이륜차 운전자
- **편의 조치** 모바일 교육 이수 인정, 공단 포털 시스템 내 교육 안내 제공

향후 계획 및 문의

- **확산 전략** 배달플랫폼사, 시민단체 연계 캠페인 및 전국적 안전문화 확산 추진
- **개선 계획** 사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 교육 및 할인제도 점진적 확대
- **담당 부서** 안전문화홍보실(최원창 052-703-0725), 안전문화부(심동윤 052-703-0425)

가짜 3.3 위장 고용 주요 감독 사례 발표

108개소 감독 중 72개소 1,070명 적발, 6억 8천만원 체불 임금 확인

감독 적발율	피해 근로자	체불 임금
67% 108개소 중 72개소 위반 확인	1,070명 형식적 근로계약·실제 사업소득 처리	6억 8천만원 휴식권·수당 미지급 적발

감독 개요

- **감독 기간** 2025년 12월 1일~2026년 3월 5일
- **감독 대상** 국세청 원천세 신고 자료·노동단체 신고 정보를 활용하여 근로소득자 5명 미만·사업소득자 합산 30인 이상 사업장 중 선정
- **적발 내용** 근로계약 체결 후 사업소득(3.3%)으로 원천징수·4대 보험 미가입 등 노동관계법 위반
- **위반 사례** 256건의 법 위반(범죄인지 9건, 과태료부과 5건, 시정조치 242건)

주요 감독 사례

- **A 콜센터** 교육생 277명을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4대 보험 미가입, 277명 1억 4천 7백만원 체불 임금 적발
- **B 금속가공업체** 137명 중 136명(99.3%)을 사업소득으로 처리·원청 협력사 35개 사업장 자체 조사로 1,300명 4대 보험 가입 추진
- **C 물품 포장업** 근로자에게 사업소득·근로소득 선택 유도, 48명 6천 4백만원 주휴수당 체불 적발
- **E 베이커리 카페** 2개 지점 '사업장 쪼개기'로 5인 미만 회피, 21명 1천 2백만원 체불 임금 적발

향후 계획 및 조치사항

- **보험 조치** 4대 보험 미가입자를 근로복지공단에 통보하여 직권 가입 및 소급 부과·과태료 처분 추진
- **세무 통보** 잘못된 사업소득 원천징수 부분을 국세청에 통보하여 지방청 세정 조치 추진
- **지속 감독** 구인광고 모니터링으로 의심 사업장 선별·지역단위 협·단체 간담회로 교육·홍보 강화

현장 목소리로 만드는 건강한 안전 일터

근로자건강센터 타운홀 미팅 개최, 250여 명 참석

센터 규모	참석 인원	미팅 시간
전국 24개소 2011년 3개소 시작	약 270명 센터장 및 직원 250명	약 1시간 30분 양방향 소통 진행

행사 개요 및 추진 배경

- **개최 일시** 2026년 3월 18일(수) 10시 30분, KT 대전인재개발원에서 진행
- **참석 규모**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전국 근로자건강센터장 및 직원 약 270명 참석
- **추진 목적**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센터의 발전 방향을 모색
- **추진 기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안전보건공단(이사장 김현중) 주관

주요 내용 및 행사 구성

- **근로자건강센터 역할**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배치,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강지킴이 역할
- **1부 타운홀 미팅**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주재로 현장의 목소리 청취, 양방향 소통 방식 진행
- **2부 교육 및 회의** 센터장 회의, 간호·근골격계·산업위생·직업심리 분야별 전문화 교육 실시
- **현장 제안사항** 보건·안전 합동 지원 방안, 과로사 예방 차별화 방안, 인력·기능 확대 등 다양한 의견 제시

향후 추진 계획

- **기능 확대 방향** 건강 상담을 넘어 소규모 사업장과 노무제공자의 안전과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안전보건 통합 지원체계로 기능 확장
- **정책 반영 계획** 타운홀 미팅에서 제안된 현장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근로자건강센터 지속적 확충,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지원체계 구축

임금·퇴직금 5억 체불 사업주 10년 만에 구속

성남지청, 해외 잠적 악의적 체불 사업주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

체불 규모	피해 인원	도주 기간
5억 1천만 원 임금·퇴직금 등 총액	21명 퇴직 노동자	10년 2015년~2025년 중국 체류

사건 개요

- **체불 사업주** 성남 분단 휴대폰 카메라 센서 제조업 운영하며 21명 노동자에게 임금·퇴직금 미지급
- **법령 위반**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의무 불이행
- **도주 경과** 2015년 체불 발생 후 약 10년간 중국에 체류하며 수차례 출석요구에 불응

구속 경위 및 혐의

- **구속 집행**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장은 3월 14일(토) 구속영장 집행 및 구속수사 착수
- **체포 계기** 최근 홍콩에서 인천공항을 경유해 중국으로 출국하려던 중 지명수배 상태로 확인되어 체포
- **악의적 행위** 고액 임금·퇴직금 체불 후 해결 의지 없이 중국에 체류하며 단 한 푼도 변제하지 않음
- **혐의 내용**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임금절도 범죄에 해당

정부 정책 방향 및 문의

- **무관용 원칙** 임금·퇴직금은 근로자 생계와 직결된 최소 권리로, 고의·상습적 체불에 대해 책임 추궁
- **향후 대응** 고액 체불, 수사 회피 등 죄질 불량 사건에 체포·압수수색·구속 등 강제수사 적극 활용
- **담당 부서** 성남고용노동지청 노동기준조사1과 (031-788-1510, 031-740-6708)

신재생에너지 기업 특별감독 착수

야구방망이 위협·흥기 폭언 사건, 감독관 8명 합동 감독팀 구성

감독팀 규모	감독 시작일	주요 점검법
8명 서울고용노동청 광역·관악지청 합동	2026.3.13 특별감독 착수일	4가지 폭행·괴롭힘·임금·근로시간

사건 개요 및 감독 착수

- **적발 내용** 서울 소재 신재생에너지 기업 대표가 사무실에서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며 위협하고 '흥기로 찌르겠다'는 폭언을 일삼음
- **감독 체계** 고용노동부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2026년 3월 13일부터 특별감독 착수, 서울고용노동청 광역·관악지청 합동 감독팀(감독관 8명) 구성
- **감독 방식** 신속하고 면밀한 현장 감독을 통해 위법 행위를 집중 점검

주요 점검 항목 및 사항

- **근로기준법 폭행 금지** 제8조 위반 여부를 중점 점검
- **직장 내 괴롭힘** 제76조의2에 따른 위반 여부 집중 살펴봄
- **노동관계법 전반** 임금체불, 근로시간 등 전체 법령 준수 현황 집중 점검
- **피해 규모 확인** 다수의 피해자 존재 가능성을 고려하여 철저한 진상 규명 추진

부처 입장 및 향후 방향

- **장관 발언** '상상하기 어려운 충격적 사건'으로 노동자 권리 침해를 넘어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중대 범죄로 규정
- **처벌 원칙** 이번 특별감독으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 조치하겠다는 의지 표현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정, 3개 법률안 국회 의결

73년 만에 감독관 제도 통일 근거법 제정, 임금 체불 구조적 개선

법률안 개수	징역상향	벌금상향
3개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등	3년→5년 임금 체불 벌칙 강화	3천만→5천만원 사업주 경각심 제고

추진 배경 및 제정 의의

- **제도 역사**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73년 만에 감독관 직무권한의 통일적 근거 법률 제정
- **명칭 변경** '근로감독관'에서 '노동감독관'으로 변경되어 노동존중 기치 강화
- **법적 체계화** 감독관의 직무·권한·집행기준이 개별 법률에 산재된 문제점 해결

주요 개선 사항

- **중앙-지방 협력체계** 고용노동부장관의 감독 권한을 17개 광역시도지사에게 위임, 지역 밀착형 감독 강화
- **임금 구분 지급**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 시 임금비용을 사업비용과 구분하여 지급(2027년 1월 시행)
- **벌칙 강화**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징역 5년 이하, 벌금 5천만원 이하로 상향
- **산재예방 책임** 감면 사업장의 중대재해 발생 시 기감면 보험료 재부과 가능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 **구조적 개선** 건설업·조선업 등 다단계 하도급 만연 업종의 임금 체불 근본적 해결
- **투명성 강화** 노동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 제고로 국민 신뢰도 증진
- **정부 지원** 지방정부 감독자 교육, 하위법령 정비 등 체계적 준비로 안정적 안착 추진

산재예방 노동안전 슬로건 공모전 당선작 발표

총 8,921건 접수, 최우수상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선정

공모전 접수	당선작 수	참여층
8,921건 1.19~2.6 기간	5건 최우수상 1건, 우수상 4건	노동자·사업주·청소년 다양한 국민 참여

공모전 개요 및 추진 배경

- **추진 목적** 안전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 및 안전문화 전파·홍보를 위한 노동안전 슬로건 발굴
- **공모 기간** 2026년 1월 19일(일)~2월 6일(금)
- **심사 방식**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전문 심사를 통해 당선작 선정
- **참여 대상** 노동자, 사업주, 청소년 등 전 국민 대상

당선작 및 활용 계획

- **최우수상**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 일터 안전과 일상의 행복이 직결됨을 표현
- **우수상 4건** '무사히 출근해서, 당연히 퇴근하기', '빠름보다 바름, 안전한 선택', '실천하는 안전수칙, 실현되는 안전일터', '위험은 공유하고 안전은 실천하자'
- **콘텐츠 제작** 홍보영상, 라디오 음원, 포스터, 리플렛 등에 선정 슬로건 활용
- **온라인 게시**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에 게시 예정

상품 지급 및 향후 계획

- **상품 지급** 최우수상·우수상 수상자에게 전자제품 제공, 공모전 참여자 50명 추첨으로 커피 기프트콘 제공
- **향후 활용** 국민 제안 슬로건을 산재예방 캠페인에 적극 활용하고 중대재해 감축 및 안전한 일터 조성에 최선 다할 계획

화재·폭발 사고 예방 긴급 현장 집중점검

건설·제조업 고위험 사업장 1,000개소 대상, 3.26~4.7 집중점검

점검 대상	점검 기간	주요 조치
1,000개소 건설·제조업 등 화재·폭발 고위험	12일간 3월 26일~4월 7일	6가지 화재·폭발 예방 핵심 안전수칙

추진 배경 및 개요

- **긴급 추진 배경** 3월 20일 대전시 대덕구 제조업체 화재사고로 노동자 사망, 유사 사고 예방
- **점검 범위** 건설현장, 제조업 등 화재·폭발 발생 고위험 사업장 1,000개소
- **점검 기간** 2026년 3월 26일(목)~4월 7일(화) 총 12일간

주요 점검 내용 및 핵심 안전조치

- **작업장 관리** 가연물 파악 및 안전장소 보관, 화재 위험작업 작업계획 수립
- **화기작업 안전** 용접·용단 시 불티 비산 방지, 주기적 환지, 화재감시자 배치
- **기본 안전조치** 전기기계·기구 점검, 제전장치 사용, 설비 접지, 정전기 방지
- **시설 점검** 소화설비 및 비상구 설치, 비상대피 훈련, 경보장치 작동 상태 확인

향후 계획 및 문의

- **법 위반 대응** 확인된 위반 사항에 즉시 과태료 부과 및 사법 조치 실시
- **관계 부처 협력** 소방청, 국토부와 협의하여 대전 대덕구 유사·동종업종 별도 긴급 점검 시행

2026년 찾아가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실시

중소규모 사업장 무료 지원, 괴롭힘 근절 선언 참여시 액자 증정

지원 대상	지난해 실적	지원 방식
50인 이하 중소규모 사업장 우선	812개 전국 사업장 교육 실시	무료 찾아가는 현장교육

추진 배경 및 교육원 개요

- **교육원 설립** 1990년 노사갈등 예방 및 건전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설립된 고용노동부 산하 교육 전문기관
- **교육 대상** 노사관계 당사자, 고용노동 업무종사자, 청소년·특고플랫폼노동자 등 일반국민
- **주요 기능** 근로자 및 사업주 교육, 공무원 직무교육,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 및 보급

주요 교육 내용 및 지원 사항

- **지원 범위** 2021년부터 50인 이하 중소사업장을 우선 대상으로 무료 찾아가는 현장지원 예방 교육 운영
- **캠페인 특징**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등의 사업장에 고용노동부와 공동 제작한 근절 선언문 액자 증정
- **교육 방식** 대면(집합) 또는 화상교육 중 선택 가능, 최소 1개월 전 신청 권장
- **목표 효과** 교육의 일회성 극복 및 현장에서의 상호 존중과 평등한 소통 분위기 조성

신청 방법 및 문의

- **신청 방법**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홈페이지 상시 신청, 세부 일정 및 계획 홈페이지 확인
- **연락처** 노동교육팀 (031-760-7770, 031-760-7772)

장애인고용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

근로지원인·직무지도원 등 4개 과정, 최신화된 콘텐츠로 2026년 본격 추진

배출 인력	양성 직종	교육 방식
2,811명	4개 직종	현장중심
지난해 10개 과정 운영 실적	직업생활상담원, 근로지원인 등	대면교육 비중 확대, 실무 중심

사업 개요 및 필요성

- **운영 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장애인의 취업과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전문인력 양성
- **사업 배경** 장애인의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위해 현장 지원 전문인력의 역할이 중요
- **지난해 성과** 10개 과정 운영으로 총 2,811명의 전문인력 배출

2026년 주요 개편 및 운영 내용

- **근로지원인 양성** 노후화된 콘텐츠를 전면 개편하여 제도·법령 최신화 및 다양한 사례 보강
- **발달장애 특화교육** 근로지원인 발달장애 특별양성교육 콘텐츠 개선, 화질 및 화면 구성 강화
- **직무지도원 양성** 현장훈련 기간 중증장애인 업무지도 교육과정 신규 운영
- **직업생활상담원** 장애인 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체의 상담원 선임 의무 이행을 위한 양성교육

교육과정 특징 및 신청 방법

- **교육 특징** 이론에서 벗어난 사례 기반 학습, 의사소통 방법, 장애감수성, 안전교육 등 실무 중심 구성
- **교육 운영** 대면 교육 비중 확대로 교육생의 집중도 및 학습 효과 제고
- **신청 방법** EDI사이버연수원 홈페이지(<https://cyedu.kead.or.kr>)에서 확인 및 신청
- **문의 처** 고용개발원 교육연수부(031-728-7068)

노동자 금융부담 완화,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용자 확대

최대 3%p 이자 지원, 지원 한도 2,000만 원, 신규 항목 4종 추가

이차보전	지원 한도	지원 대상
3%p 대출이자 최대 지원율	2,000만원 혼례비·자녀양육비·노부모부양비	중위소득 월 5,359,036원 이하

사업 개요 및 추진 배경

- **사업명**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용자 사업을 지난해 12월부터 확대 시행하여 더 많은 노동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지원 내용** 금융기관(기업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발생하는 이자의 일부(3%p 이내)를 지원하여 금융 부담 경감
- **효과 사례** 연 6% 금리로 2,000만 원 대출 시, 공단이 3% 이자 지원하면 노동자는 3%만 부담하여 첫째 60만 원 절감

주요 확대 내용

- **자녀양육비** 지원 대상을 7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하여 학령기 자녀 양육비 부담 경감
- **신규 항목** 노부모부양비와 장례비를 신규 지원 항목으로 추가하여 생애주기 전반의 필수 지출 지원
- **지원 한도** 혼례비·자녀양육비·노부모부양비는 최대 2,000만 원, 장례비는 최대 1,000만 원으로 확대
- **신청 기간** 혼례비 신청 가능 기간을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 장례비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지원 대상 및 상환 방식

- **대상자**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3개월 이상 산재보험 가입 1인 자영업자 중 중위소득 이하
- **상환 조건**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
- **문의처** 근로복지넷 홈페이지(welfare.comwel.or.kr) 참고 또는 공단 고객센터(1588-0075)로 문의

AI 일자리 매칭, 하루 57명 취업 연결

청년·기업이 선택한 AI 고용서비스 확대...2025년말 172만명 취업

일일 취업연결	전년대비증가율	매칭취업증가
57명/일	66%	61%
AI 추천 일자리 취업자	전체 매칭 취업자 증가	추천일자리 실제 취업

추진 배경 및 개요

- **주요과제** 구직자는 수많은 공고 중 맞춤 일자리 찾기 어렵고, 기업은 적합한 인재 발굴에 시간과 비용 소비하는 문제 해결
- **정책목표** AI를 사람을 대체하는 기술이 아닌 취업을 돕는 '똑똑한 커리어 파트너'로 구현
- **개최행사** 3월20일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청년과 함께하는 AI 고용서비스 오픈토크' 개최

주요 성과 및 이용자 선호도

- **구직자선호서비스** 경력설계·이력서 컨설팅·취업활동계획 수립지원(20~40대는 이력서·자소서, 50대는 생애주기별 경력설계 중심)
- **기업선호서비스** AI 인재추천·기업지원금 추천·채용확률 기반 구인컨설팅 등 채용 전반 지원 기능
- **잡케어이용증가** 41만2천건으로 전년대비 29% 증가, 이용자 90% 이상이 30대 이하 청년층
- **AI구인공고효과** AI 활용 공고는 일반 공고 대비 입사지원자 41% 많고 열람건수도 11.5% 높음

2026년 확대 계획 및 추진일정

- **구직자서비스** 반응형 직업심리검사(8월), AI 이력서·자소서 컨설팅(12월), AI 경력설계 전 생애 서비스(12월) 순차 도입
- **기업서비스** AI 인재추천 개선(3월), 채용확률 기반 구인컨설팅(6월), AI 채용마당 구축(12월)
- **행정지원** 채용법령 위반 검증(6월), AI 직업상담 확대(8월), 거짓구인광고 AI 점검시스템(12월) 운영

2026년 2월 고용동향 및 평가

고용률 61.8% 역대 최고, 취업자 23.4만명 증가로 3개월 만에 20만명대 회복

고용률	취업자수	경합률
61.8%	+23.4만명	64.0%
전년대비 +0.1%p, 2월 기준 역대 최고	전년대비, 3개월 만에 20만명대 증가	전년대비 +0.3%p, 역대 최고

주요 고용지표

- **고용률** 15세 이상 61.8%(+0.1%p), 15~64세 69.2%(+0.3%p)로 2월 기준 역대 최고 기록
- **경제활동참가율** 64.0%로 +0.3%p 상승, 1999년 6월 이후 최고 수준 달성
- **실업률** 3.4%로 +0.2%p 상승, 2월 기준 역대 4위 수준으로 양호한 상황 유지
- **취업자 증감** 전년대비 +23.4만명 증가, 1월(10.8만명) 대비 증가폭 확대

산업별·계층별 고용 동향

- **서비스업** 직접일자리사업 재개 및 설연휴 명절특수로 +37.4만명 증가(1월 +25.6만명), 보건복지업 +28.8만명으로 증가폭 확대
- **제조업** 반도체·자동차 양호한 수출실적 및 기업심리 회복으로 감소폭 축소(-1.6만명), 일평균 수출 증가율 49.3%
- **건설업** 설연휴 전 조업감소로 감소폭 확대(-4.0만명), 건설기성도 -11.3% 수준
- **청년층** 고용률 43.3%(△1.0%p) 하락, 쉬었음 48.5만명으로 높은 수준 지속, 실업률 7.7%(+0.7%p) 상승

정부 대응 및 향후 계획

- **지정학적 리스크 관리** 중동 상황 등 대외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 추경 신속 편성, 민생안정 및 경제회복 지원
- **취약부문 보완** 청년고용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조속히 마련, 산업별·계층별 고용상황 면밀 모니터링
- **경제 성장동력**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 등을 통한 고용창출력 개선 추진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등 3개 법률안 국회 의결

73년 만에 노동감독관 통일법 제정, 임금체불 벌칙 상향 및 지방감독 권한 위임

제정 의의	벌칙 상향	지방 위임
73년 만에	5천만 원	17개
감독관 통일 근거법 첫 제정	임금체불 벌금 상향 (3천→5천)	광역시도지사 감독권 위임

추진 배경 및 개요

- **법률 제정 배경**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73년 만에 노동감독관의 직무·권한에 관한 통일적 근거 법률 제정, '근로감독관'에서 '노동감독관'으로 명칭 변경
- **기존 문제점** 감독관의 직무·권한·집행 기준이 개별 법률에 산재되어 있었으나, 이번 법 제정으로 통일적 규율 가능
- **업무 범위 확대** 임금체불, 산업재해, 직장 내 괴롭힘 등 감독관 업무 확대에 따른 노동행정의 예측 가능성·투명성 제고
- **지방정부 권한 위임** 고용노동부장관의 사업장 감독 권한 일부를 17개 광역시·도지사에게 위임, 지역 특성에 맞는 생활밀착형 예방감독 실시

주요 법률 개정 내용

-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감독관의 직무·권한·집행 기준을 통일적으로 규율하고, 지방정부의 사업장 감독 수행 권한 확대 (공포 8개월 후 시행)
- **근로기준법 임금 구분 지급**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임금 비용과 사업비용을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의무화, 건설·조선업 등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의 임금체불 개선 (2027년 1월 1일 시행)
- **임금체불 벌칙 상향** 사업주 벌칙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 (공포 6개월 후 시행)
- **산재보험료 부과 강화** 재해예방 활동으로 감면받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감면받은 보험료를 재산정·부과하여 사업주 책임 강화 (공포 6개월 후 시행)

향후 계획 및 문의

- **추진 방향** 법률 신속 안착을 위해 현장과 지속 소통하고 하위법령 정비, 감독관 교육 등 만반의 준비 추진
- **중앙-지방 협력** 지방정부의 감독 수행 어려움 해소를 위해 감독관 교육 및 필요 지원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국민 노동권 보호 추진

건설일용직 퇴직공제부금 8,700원 인상

노·사·정 역대 최초 합의, 6,500원에서 8,700원으로 2,200원 인상

부금 인상액	퇴직공제금	부가금
2,200원	8,200원	500원
기존 6,500원 → 8,700원	2,000원(33.8%) 인상	300원에서 200원 인상

추진 배경 및 의의

- **제도 개요** 법정 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건설 일용노동자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퇴직공제제도
- **합의 성격** 건설업계 고령화 및 인력난 해소를 위해 노동계(한국노총·민주노총), 건설업 단체(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 정부가 2026년 1월~3월 정책협의회를 통해 노·사·정이 뜻을 모은 역대 최초의 자율적 합의
- **정책 의미** '건설노동자의 처우 개선이 곧 산업 경쟁력'이라는 공감대 아래 숙련인력 노후 보장 및 고용환경 개선 기대

주요 내용 및 사업 계획

- **부금 구성** 퇴직공제금 8,200원(퇴직금 형태로 노동자 수령) + 부가금 500원(공제회 사업·운영비)
- **적용 시점** 2026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
- **부가금 활용** 청년층 기능향상 훈련 확대, 노동자 상조서비스 및 취업지원 거점센터 운영,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등 노동자와 사업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복지 및 고용환경 개선사업에 집중
- **지원 사업** 2025년도 21,361명 대상 5,797백만원 집행, 단체보험·건강검진·결혼출산지원·자녀교육비·장학금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향후 계획 및 문의

- **상시 기구화** 정부와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정책협의 과정을 상시 기구화하여 향후 건설현장의 다양한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논의
- **담당 부처**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지영철 과장 044-202-7404),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김성환 과장 044-201-3538), 건설근로자공제회 전략기획부(서주형 과장 02-519-2013)

AI 훈련지원센터 30개소 선정, 전국 중소기업 지원

AI확산센터 10개소, AI공동훈련센터 20개소 선정으로 2만5천개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선정센터	지원기업	전문인력
30개소 AI확산센터 10개소, 공동훈련센터 20개소	2만5천개 지역 중소기업 대상 방문 훈련	약 500명 훈련코치 및 능력개발주치의

추진 배경 및 개요

- **추진기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인프라 부족 지역 5극3특 중소기업의 AI 훈련 지원 추진
- **선정센터** 중소기업 AI훈련확산센터 10개소와 AI특화 공동훈련센터 20개소 구성
- **지원목표** 지역 중소기업의 기초역량부터 핵심인재 육성까지 체계적인 AI 전환 지원

주요 프로그램 및 내용

- **AI확산센터** AI훈련코치 약 200명이 4월 2주부터 본격 활동, 기업별 훈련로드맵 수립(2천개소), S-OJT(600개소) 등 맞춤형 지원 실시
- **AI공동훈련센터** 지역 내 대기업·거점대학의 우수인프라 활용하여 무상 AI특화훈련 제공, 제조공정 불량예측·데이터 대시보드 구축 등 현장 실무형 과정 운영
- **협업체계** 관계부처 실무협의체 구성, 각 부처 AX 지원사업 참여기업(7,200개사) 대상 훈련 수요조사 진행
- **우수사례 발굴** 분기별 정례협의회로 지역·업종별 성공사례 공유, 연말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신청 및 문의

- **신청방법** HRD4U 홈페이지(www.hrd4u.or.kr)에서 AI확산센터 서비스 신청 및 AI공동훈련센터 훈련과정 확인 가능
-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기업훈련지원과(044-202-7264), 한국산업인력공단 능력개발기획부(052-714-8211)

배우자 출산휴가 업무분담 지원금 신설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남성 육아참여 확대 및 고용지원 제도 5대 개선

입법예고	배우자휴가	개선항목
41일간 3.26~5.6 의견수렴	20일 연속 업무분담 지원금 적용	5개 제도 전반적 개선

추진 배경 및 개요

- **입법예고**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2026년 3월 26일부터 41일간 입법예고
- **목표** 남성의 실질적 육아참여 확대 및 중소기업의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여건 개선
- **정책방향** 고용보험이 일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촘촘한 안전망으로 기능

주요 개선 내용

- **배우자 출산휴가 업무분담 지원금** 20일 연속 사용 시 동료노동자에게 지원금 지급(기존: 육아휴직·단축만 해당)
- **지역고용촉진지원금 개선** 조업시작 신고 기한을 1년 6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하여 고용창출 촉진(특수사정 시 1년까지 연장 가능)
- **단기 육아휴직 급여 정비** 월 단위 급여 조정기준을 휴직 기간에 비례하여 1주·2주 단위로 적용(2026.8.20 시행)
- **고용촉진장려금 신청기간** 12개월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하여 사업주 신청 편의성 강화
- **재직자 직업훈련 수당 신설** 주말훈련 참여 재직자에게 1일 5만원 지급(구체사항은 고시에서 규정)

향후 계획 및 문의

- **의견수렴**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누구나 의견 제출 가능
- **확인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www.mois.go.kr)에서 입법예고안 확인

제2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준비

가입 대상 30인→100인 미만으로 확대, 기금 규모 1.5조원

가입자	적립금	2025수익률
약 16만명 2022년 9월 이후 현황	약 1.5조원 누적 기금 규모	8.67% 안정적 운용 실적

추진 배경 및 개요

- **법적 근거** 2025년 3월 17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공포로 중소기업퇴직기금(푸른씨앗) 가입 대상 확대
- **단계적 확대** 2026년 7월부터 50인 미만, 2027년 1월부터 1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예정
- **제도 안착** 2022년 9월 도입 이후 안정적으로 성장하며 중소기업 근로자 퇴직연금 사각지대 해소 추진

주요 운영위원회 의결 내용

- **2026년 자금운용계획** 중장기 자산 배분 전략을 바탕으로 안정성과 수익성 균형 추구
- **전담운용기관 재선정** 제도 시행 후 처음 추진되는 절차로 기금 규모 증가에 효과적 대응
- **주거래은행 재선정** 운용기관 간 경쟁과 성과 중심 체계 강화로 전문성·책임성 제고
- **수익률 기록** 2023년 6.97%, 2024년 6.52% 등 안정적 운용 실적 확보

향후 계획 및 기대효과

- **제도 확산 대응** 법 개정에 따른 차질 없는 시행 준비 및 법령 시행 준비 추진
- **운용 효율성 제고** 경쟁 기반 선정을 통한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전문성 강화
- **사각지대 해소** 일하는 모든 사람의 가입자부담금계정 가입 가능으로 노후소득 보장 체계 강화

중소기업 육아휴직 대체인력 최대 1,880만원 지원

민관 협력으로 2,199개 사업장에 35.5억원 지원, 육아휴직 활성화 추진

최대 지원금	지원 사업장	추가 지원금
1,880만원 연간 대체인력 채용시	2,199개소 총 35.5억원 지급 실적	200만원 신한금융그룹 출연 문화 확산

사업 개요 및 지원 내용

- **지원 규모**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시 정부 1,680만원(월 최대 140만원)과 신한금융그룹의 추가 200만원으로 최대 1,880만원 지원
- **지원 재원** 신한금융그룹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100억원 출연하여 신설된 '대체인력 문화확산지원금' 사업
- **지원 목표**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경감으로 육아휴직 활용 확대 및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 **지원 현황** 2025년 7월부터 2026년 1월말까지 2,199개 사업장에 총 35억 54백만원 지급 완료

지원 대상 및 신청 절차

- **대상 기업** 5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최근 3년간 대체인력지원금 받은 이력이 없고, 2025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고용한 기업
- **지원 방식** 채용 후 3개월과 6개월 시점에 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을 2회에 걸쳐 지급
- **신청 방법** 고용센터 또는 고용24(www.work24.go.kr)를 통해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신청시 '대체인력 문화확산지원금'을 함께 신청
- **심사 절차** 고용센터 접수 → 고용노동부 본부 요건 심사 → 대·중소협력재단이 지원금 지급

현장 사례 및 향후 계획

- **기업 사례** 인천 기어 제조업체 대화감속기는 남성 직원의 12개월 육아휴직 신청시 대체인력 채용으로 인건비 부담을 크게 경감, 대체인력은 추후 정규직 전환 예정
- **정책 효과** 제도 도입 후 중소 제조업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육아휴직 사용 분위기 형성, 남성 육아휴직 활용률 개선
- **향후 계획** 전문가 및 워킹맘앤대디 멘토단 의견수렴을 통해 남성이 육아휴직을 선택하기 어려운 여건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 마련 추진

노동자 금융부담 완화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확대

이자 최대 3%p 지원, 한도 2,000만 원 확대, 4개 항목 신설

이자지원	용자한도	예산규모
최대 3%p 개인 신용대출금리 범위 내	2,000만원 혼례·양육·부양비 기준	30억원 이차보전금 총규모

사업 개요 및 추진 배경

- **사업명**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용자 사업 (2025년 5월부터 계속 추진)
- **추진기관**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이 새 학기·결혼 등 봄철 지출 증가에 대응
- **지원대상** 3개월 이상 근속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중위소득 이하)

확대 개편 주요 내용

- **지원범위 확대** 자녀양육비 대상을 7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 학령기 자녀 교육비 부담 완화
- **신규항목 신설** 노부모부양비(부모 1인당 500만원)·장례비(1,000만원)를 새로운 지원 종목으로 추가
- **신청기간 연장** 혼례비는 혼인신고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장례비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로 허용
- **상환조건**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 선택 가능

사업효과 및 문의

- **금융부담 경감** 연 6% 금리 2,000만원 대출 시 연 60만원 이자 절감 효과 발생
- **문의처** 근로복지넷 홈페이지(welfare.comwel.or.kr) 또는 공단 고객센터(1588-0075)

중소기업 AI 전환 현장훈련 5개 운영기관 선정

AI솔루션기업이 직접 중소기업 현장 찾아 맞춤형 훈련 제공

운영기관	훈련비 지원	총 예산
5개소 AI솔루션기업 중심 운영	300% 기존 사업 대비 3배 지원	6억원 현장훈련 추진 예산

사업 추진 배경 및 개요

- **현장 적용의 한계** 정형화된 외부훈련과 실제 업무 환경의 괴리감으로 인한 현장 도입 어려움 개선
- **운영기관 구성** 티쓰리큐, 심플랫폼, 제네시스랩, 비앤브이솔루션, 파인더아이 등 5개 AI솔루션기업
- **신규 방식 도입** 교육 전문가가 아닌 현장 기술력을 가진 AI솔루션기업이 중소기업을 직접 방문

주요 지원 내용 및 특징

- **현장 진단 및 솔루션 도출** 기업 현장 방문을 통해 업무 분석 및 AI 활용 가능성 진단 후 맞춤형 AI 적용 방안 도출
- **문제해결형 훈련** AI 솔루션을 활용한 현장 문제해결형(PBL) 직무훈련으로 실제 업무 데이터 활용 및 AI 적용 과정 지원
- **높은 훈련비 지원** 과정개발비 300만원, 강사수당 시간당 30만원, 훈련비는 NCS단가 기준 3배 지원으로 기업 부담 경감
- **내부 역량 내재화** 기업 내부전문가를 훈련강사로 참여시 AI훈련강사 역량교육 및 강사수당(시간당 5만원) 제공

AI솔루션기업별 솔루션 특징

- **제조관리AI** 심플랫폼과 파인더아이의 데이터 기반 분석예측, 품질검사, 자동화 등 제조 산업 최적화 솔루션 제공
- **업무지원AI** 비앤브이솔루션과 제네시스랩이 반복업무 자동화, 데이터 연계 워크플로우, 프로세스 최적화 솔루션 제공
- **통합플랫폼** 티쓰리큐가 DX/AX 전주기 공통플랫폼으로 데이터 관리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지원

건설근로자 결혼식 지원금 접수 개시

3월 16일부터 500명 대상 1인당 60만원 지원금 선착순 접수

지원인원	지원금액	접수시작
500명 선착순 접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60만원 기존보다 10만원 인상된 금액	2026.3.16 건설e음 등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사업 개요 및 추진 배경

- **사업명** 건설근로자공제회 '결혼식 지원금' 신청 접수
- **목적** 건설근로자의 예식 비용 부담 경감 및 실생활 복지증진
- **기관**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직무대행 권혁태)
- **인상내용** 기존 50만원에서 10만원 인상하여 60만원 지급

신청 자격 및 접수 방법

- **자격요건** 공제회 총 적립 일수 252일 이상, 직전 연도(또는 12개월) 적립 일수 100일 이상 충족하고 2026년도에 예식을 올렸거나 예정된 건설근로자
- **지원규모** 총 500명 선착순 접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 **신청방법** 건설e음(eum.cw.or.kr) 온라인 접수, 우편, 팩스, 전국 지사·센터 방문 신청
- **문의처**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센터(02-519-2090, 02-519-2095)

건설근로자 공제회 주요 복지서비스

- **건강관리** 단체보험(암진단비·골절수술비 등 23개 항목), 종합 건강검진(1인당 25만원 내외)
- **가족친화** 결혼식 지원금(60만원), 휴가지원(40만원 포인트 또는 호텔 숙박)
- **자녀교육** 초등학교 20만원, 중·고교생 30만원, 대학생 장학금 200만원 현금 지급
- **상담지원** 변호사 법률상담, 세무사 세무상담, 노무사 노무상담(전국 7개 지사)

전자카드 단말기 임대비용 지원 2년 연속 시행

소규모·중규모(300억원까지) 사업장 확대 지원, 지원기간도 연중 확대

지원 대상	지원 기간	신청 기간
300억원 이하 기존 3억원 미만에서 중규모까지 확대	연중 전체 기존 최대 5개월에서 공사기간 전체로 확대	3~12월 2026년 3월부터 12월까지 접수

사업 개요 및 배경

- **시행 기관**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직무대행 권혁태)
- **추진 목적** 중·소규모 사업장의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비용 부담 완화 및 근로자의 자발적 전자카드 사용 환경 조성
- **건설경기 대응**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사업주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책 마련

주요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확대** 기존 소규모(3억원 미만) 외에 중규모(3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및 하수급사까지 포함
- **단말기 유형** 모바일 카드 기능(NFC·BLE) 탑재 이동형 단말기 제공
- **근로자 활용** 실물카드 없이 '건설e음'의 모바일 카드 선택 후 핸드폰 태그로 출퇴근 기록
- **신청 방법** 신청서, 유의사항 확인서, 사업자등록증을 이메일(card@cw.or.kr)로 제출

신청 안내 및 절차

- **신청 기간** 2026년 3월부터 12월까지(착공 순 지원)
- **설치 계획** 퇴직공제 관계 성립 신고 시 '단말기 설치 계획서' 제출 필수
- **문의 처** 건설근로자공제회 전자카드사업부(02-519-2131, 02-519-2135)

건설근로자 자녀 교육비 지원 확대

초등 20만원, 중·고등 30만원 지급, 지원 인원 대폭 확대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만족도
3,000명 전년대비 1,600명 증가	3,000명 전년대비 2,500명 증가	94.9~97.3점 전년도 조사 결과 매우 높음

사업 개요 및 지원 내용

- **사업명** 건설근로자 초·중·고교생 자녀 지원금
- **시행시점** 2026년 3월 9일부터 접수 개시
- **지원금액** 초등학생 1인당 20만원, 중·고등학생 1인당 30만원
- **지원규모** 총 6,000명(초등 3,000명, 중·고등 3,000명)

신청 자격 및 절차

- **자격요건** 공제회 총 적립 일수 252일 이상, 직전년도 또는 직전 12개월 적립 일수 100일 이상
- **선정방식** 접수순으로 선정,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 **신청방법** 건설e음(eum.cw.or.kr), 우편, 팩스, 전국 지사·센터 방문
- **신청대상** 초·중·고교생 자녀를 둔 건설근로자

기타 복지서비스 및 문의

- **건강관리** 단체보험, 건강검진 제공
- **가족친화** 결혼식 지원, 휴가지원 운영
- **자녀교육** 초·중·고 교육비 및 대학 장학금 지원
- **문의처**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센터부(02-519-2097)

폭염 대비 이동식에어컨 등 예방장비 지원 본격화

280억 원 투입, 소규모 사업장·건설현장 대상 구매·임차비용 지원

투입 예산	지원 한도	지원 비율
280억 원 온열질환 예방장비 지원	2,000만 원 사업당 구매·임차 한도	구매 70% / 임차 80% 사업장 규모별 상이

추진 배경 및 개요

- **추진 시기** 2026년 3월 4일부터 시작, 4월 15일 18시까지 신청 접수
- **추진 대상**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및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건설현장
- **취약 업종** 건설업, 조선업, 물류유통업, 폐기물처리업, 농축산업 등
- **추진 배경** 매년 심화되는 폭염에서 현장 노동자 건강 보호

주요 지원 내용

- **구매 지원** 이동식에어컨, 제빙기, 산업용선풍기, 그늘막 구입 시 소요금액 70% 지원(최대 2,000만 원)
- **임차 지원**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필요한 장비를 패키지로 구성해 임대 시 80% 지원(최대 6개월, 2,000만 원)
- **무상 보급** 디지털체감온도계 4.2만 개, 쿨토시·쿨패치 등 쿨키트 2.8만 개 무상 제공
- **휴식 유도** 체감온도 33°C 이상 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부여 권장

신청 방법 및 문의

- **신청 방법** 산업안전포털(portal.kosha.or.kr)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온라인 신청
- **문의처** 건강일터 조성지원사업 대표번호 1644-8845, 지역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사 연락